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한반도 평화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27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 및 회부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5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및 발의 배경	5
2.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6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69인
2. 제안일자 : 2025년 10월 10일
3.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0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추었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남북 당국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합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심화로 인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가 다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 정부 3년 동안 무인기 침투 등 ‘북풍’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적 과제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전쟁 불용’이라는 국민적 뜻과 국제사회의 평화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남북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견지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남북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인도적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평화가 국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법적·제도적 종전선언 없이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70년 넘게 지속되어 옴.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 대화 단절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더하여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현 정부 또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대화 복원, 인도적 교류 확대, 평화경제 실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역사적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지를 천명할 적기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및 발의 배경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법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없이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안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군사적 활동 확대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남북 당국은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남북정상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2018), 「9·19 평양공동선언」(2018) 등을 통해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온 바 있음.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 관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화 재개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비핵화 추진, 군

사적 긴장 완화, 남북 대화 복원, 인도적 교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외교의 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동 결의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동 결의안은 총 6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의안 주문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상호 신뢰구축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군사적 활동 증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 조건이자 지속 가능한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그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음.

안 주문 제1호는 남북이 상호 적대적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

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됨.

결의안 주문 제2호 및 제3호는 대한민국 국회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견지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하는 한편,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북미 간 대화 재개 역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등은 시급한 인도적 과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 인도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남북 적십자 채널 복원,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

안 주문 제2호 및 제3호는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화 재개,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의안 주문 제4호는 남북이 과거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간 남북 간의 합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적 틀로 기능해 왔는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남북정상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2018), 「9·19 평양공동선언」(2018) 등은 시대별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해온 주요 합의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합의들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추진 등에서 남북 간 공통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합의는 정치·안보 환경의 변화, 정권 교체, 국제정세의 영향 등으로 이행이 중단되거나 실질적 효과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결의안 주문 제5호 및 제6호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내용임.

이는 단절된 남북 관계의 복원과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여야가 협력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동 결의안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평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적·외교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고, 2025 APEC 정상회의 등 국제적 협력의 장에 이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한반도 평화 결의는 대내외적으로 시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 6788-5263